



보도시점 2025. 12. 11.(목) 배포 시 2025. 12. 11.(목)

국가데이터처, 2026년 업무보고 실시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에 역점 -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12월 1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과 함께 네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심의기구인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중요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 등록제 및 품질컨설팅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범정부 데이터 벤류업 및 활용 강화를 추진한다.

AI가 통계데이터를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진단부터 분석 및 반출까지의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데이터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이동DB, 사회보장DB 등과 같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자료를 결합한 융합데이터를 개발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혀 나갈 예정이다.

셋째,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생활인구와 지역투자 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여 현실반영도를 높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사회 변화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다문화 가구, 결혼의향 등 202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불평등 지표 및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 고용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자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를 개선하는 한편,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리별 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 등) 현황을 통계지도 형태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서비스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표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아동가구 통계지도, 업종별 통계지도와 같은 SGIS 기반 통계정보 시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AI 및 데이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완성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2-481-2584)
		담당자	서기관	이희천 (042-481-2128)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책임자	과 장	노형준 (042-481-6959)
		담당자	사무관	손경국 (042-481-2314)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혁신과	책임자	과 장	송주화 (042-481-2186)
		담당자	사무관	우한수 (042-481-6947)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연 (042-481-2313)
		담당자	사무관	심규호 (042-481-2327)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2025. 12. 11.



목 차

01 업무 추진방향

02 중점 추진과제

-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관리체계 확립
-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및 활용 강화
-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1 업무 추진방향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 하는 통계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리체계 확립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및 활용 강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2 중점 추진과제



1)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리체계 확립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26)

각분야별 데이터 정책 조정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수집·연계 활용 지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재현자료, 동형암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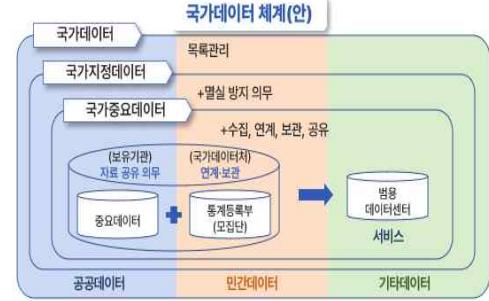
▪ 국가데이터위원회 운영

-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심의기구(국무총리 소속)
- 민관 실무책임자로 데이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내실화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의 멸실 방지 및 연계·결합 촉진



▪ 국가데이터 등록제, 분류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로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 관리·제공

기대효과 → 데이터 통합·관리 거버넌스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민간·공공 혁신 지원

2 중점 추진과제



2)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및 활용 강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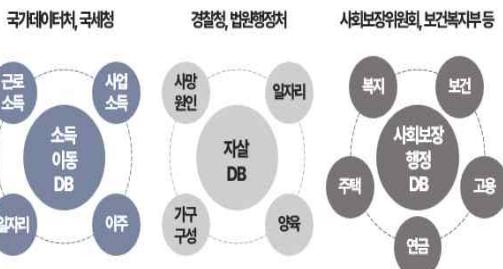
-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 AI가 통계데이터를 쉽게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구조로 설계



- AI 기반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 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진단부터 분석·반출까지 AI를 도입하여 데이터 개방·연계 수요 대응

경제·사회데이터를 연계한 융합데이터 개발

- 소득이동DB, 자살DB, 사회보장DB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하여 분야별 분석 및 현안 대응



기대효과 →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검색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활용으로 데이터 가치 극대화

2 중점 추진과제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26)

포용적 성장과 경제 활성화

경제총조사 실사

AI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등 산업 생태계 변화 측정

지역통계 활동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지역투자동향지표 등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대표 품목 및 가중치 산정 등

공정한 사회와 복지 강화

가족돌봄 결혼의향 반지하-올탑박 등 사회상 반영

불평등 지표 연구

자산 반영 소득분배지표 및 다차원 불평등 지수

신규 고용형태 파악

디지털플랫폼 고용 측정 추진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망원인과 가구구성 양육 일자리 등 연계

소들이동통계 개선

일자리 이주 등과 연계하여 경제적 계층이동 상세 분석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현안 대응력 향상 및 국정과제 지원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2025. 12. 11.

목 차

I. '25년 추진성과	1
II. 업무 추진 여건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3
III. 중점 추진과제	5
1. 법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5
2. 법정부 데이터 밸류업	7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10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14

I. '25년 추진 성과

□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10월)

* 분산된 국가데이터 총괄조정·활용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 검토 등

□ 통계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확충

- (5년 주기 총조사) 사회변화상 반영 항목, 조사 전 과정 디지털화 등 2025 인구주택총조사(11월) 및 농림어업총조사(12월) 성공적 실시

- (인구위기 극복) 초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 및 위기에 따른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확충

* 분기 GRDP 공표(6월),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12월), 육아휴직 통계 세분화(12월), 이주배경인구통계 개발(12월), 생활인구 지역확대(89개 → 107개) 및 시각화(12월) 등

- (경제·삶의 질 향상) 현실 반영도 및 설명력 높은 경제통계 개발*,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복지통계 확충**

*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12월) 등

** 고립·은둔 파악·공표(11월), 연금통계 포괄범위(60~64세) 확대(8월), 가족돌봄 현황 ('영케어러' 등) 파악(11월), 옥탑, 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 공표(7월) 등

□ 통계 ·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 (통계정보 서비스)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공간정보서비스(SGIS)의 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 통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챗봇 통계서비스(코봇1.5)(6월), 청년지표(48개)를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 서비스(6월)

- (데이터 서비스)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통계 DB」를 추가 구축하고,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및 대용량 자료처리 기능 보강

* 안전한 공간에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강원센터 추가로 전국 16개소 운영, 10월)

□ 국가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제도 개선) 보고·가공통계 승인심사 간소화, 실험적통계* 대상 확대,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분과 신설(1월)
 - * 실험적통계: (기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나 새로운 방식 적용 → (개선) 기준+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는 통계 추가
- (품질관리 강화) 공표 전 자료처리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 공표자료 사후 점검강화, 품질진단 대상 확대 및 핵심진단* 신설 등
 - * 신뢰성 이슈가 예상되는 통계 5종 선정(2월, 국통위 품질분과)하여 진단 실시
- (통계분류 지원)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제·개정
 - * (제정) 탄소소재부품·핵심광물재자원화·산림 산업 등 9종, (개정) 로봇산업, 해양수산업 2종

□ 디지털 기술 도입 및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

- (디지털 기술 도입)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업통계 과학화*, AI 활용 챗봇 서비스, 보이스봇 활용한 조사효율화**, AI 활용 분류 자동화
 - * 농림위성(26년 발사, 농촌진흥청·산림청·우주항공청) 영상, 디지털 벼작황시스템(농촌진흥청) 수집자료 등 관측 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업통계 고도화 관련 관계부처 협력 추진
 - ** AI 보이스봇을 활용하여 조사요청 및 URL 발송 등 업무 자동화 검토 및 시험 운영
-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다자 및 양자협력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선진 통계기법 공유·확산으로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

* ('24) 63억원 → ('25) 76억원, (신규) ADB 공조 우즈베키스탄·UNSIAP 공조 초청연수

보완점 및 평가

- ▶ AX 시대를 맞아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정책의 총괄·조정과 연계·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 ▶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국가통계·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충·서비스 필요

II. 업무 추진 여건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업무 추진 여건

-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데이터처 승격('25.10.)으로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의 효과적 수행 요구
 - 데이터 총괄·조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필요
 -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지원 필요
 - 공공·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의 융합·분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필요
- (통계 생산)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개선 수요 증가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혁신경제 추진 지원을 위한 경제구조변화 파악, 정확한 경제규모 산정 및 동향 파악 필요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 필요
 -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확충에 대한 요구 지속
- (통계·데이터 서비스) 더 많은 통계 및 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 증가
 - 디지털 전환과 정부부문 AI 도입·확산에 따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통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지능형 서비스 요구
 - 데이터 기반 연구, 정책지원, 민·관 협력 등으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셋 확충 및 안전한 데이터 결합·개방 필요
 - 믿고 쓸 수 있는 국가통계·데이터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업무추진 방향

비 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추진 방향

1.
법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2.
법정부 데이터
밸류업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주요 추진 과제

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②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①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②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③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① 포용적 성장과 경제활성화 지원

② 공정한 사회 및 복지강화 지원

③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지원

①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② 국가통계 제도·기준 정비 및 연구·교육

③ 대내외 협력을 통한 통계·데이터 발전 선도

III. 중점 추진과제

1 법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1-1.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총괄·조정) 각 분야별 데이터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무개선 요구권으로 데이터정책 간 조율
 - *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을 극대화
- (연계·활용) 국가중요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책·연구·산업 목적의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근거 마련
 - * 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국민생활·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는 중요성·활용성이 높은 자료·정보
- (안전·개방) 범용 데이터센터 설치 등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
 - * 범용 데이터센터 및 각 기관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보호 신기술 적용



□ 「국가데이터위원회(가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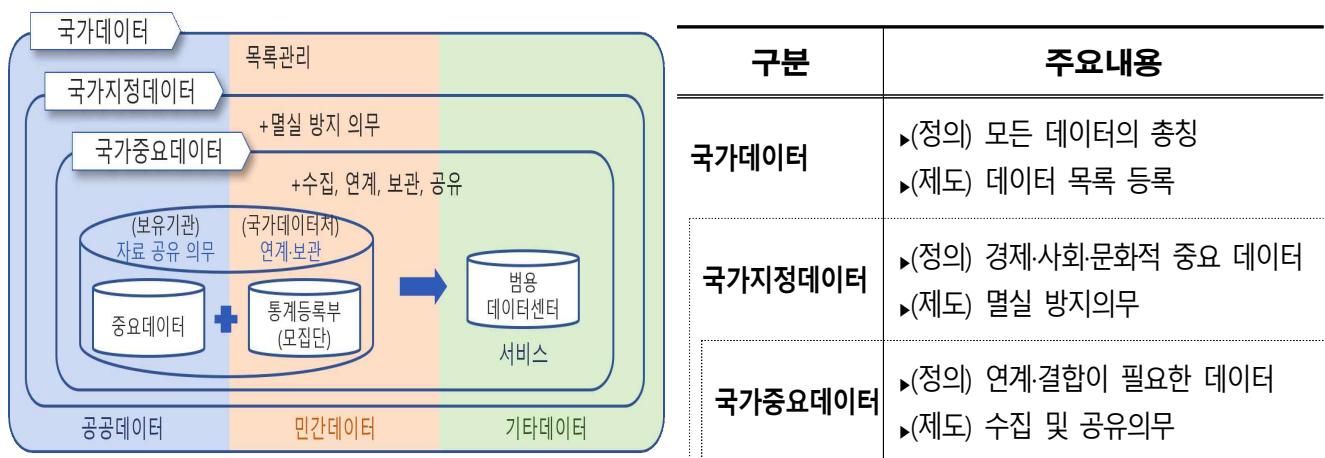
-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영역별 산재해 있는 데이터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과 사무개선 요구권 등 권한 부여
 - * (구성) 데이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국가데이터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며, 국가데이터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 역할 수행
- (주요기능) 국가데이터 정책 조정, 국가데이터 지정 관리 등
 - (본위원회) 데이터 각 영역별 정책의 조정, 연계 결합 등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국가지정데이터·국가중요데이터 지정 등 심의
 - (조정위원회) 민·관 실무책임자로 구성, 상시적으로 데이터정책 총괄·조정

1-2.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국민의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지정 · 중요데이터 선정 · 관리

- (국가데이터 선정) 국가지정데이터^(가칭) . 국가중요데이터^(가칭) 선정 및 국가데이터 제공 요구권 등 연계·활용의 법적 근거 강화
 - (국가데이터 체계적 관리) 목록등록, 멸실 방지, 국가중요데이터의 연계·결합 등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 국가데이터의 이용권 확대 및 국가중요데이터의 국외 유출 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권리 보장 기반 마련

< 국가데이터 체계(안) >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 (데이터 등록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사 중복 검토 및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조정 등을 위해 데이터 등록 의무
 - (데이터 분류체계 구축)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데이터의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 국가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value-up)

2-1.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범용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리

- (범용데이터센터 구축) 정부통합 범용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구축하여, 국가중요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 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한 국가지정데이터, 영역별 등록부에 필수 데이터를 수집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중요데이터 등

- (국가 데이터센터 지원) 각 부처가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국가데이터를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여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 융합데이터 개발을 통한 범정부 데이터 가치 창출

- (융합데이터 개발)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추진}에 근거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한 범정부 융합데이터 구축으로 데이터 밸류업 추진

〈 범정부 융합데이터 구축 (예시) 〉

◆ [과거] 막혀있던 데이터 생태계 → [확장] '융합데이터' 형태의 데이터셋 구축

① 소득이동 DB : 개인수준 사회이동성 파악하여 취약계층 정책 효과 분석

* 인구·가구등록센서스+소득+교육+취업+자산·부채 등

② 자살 DB : 사망자 중 자살자에 대한 현황 등 분석

* 사망자동계등록부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 일자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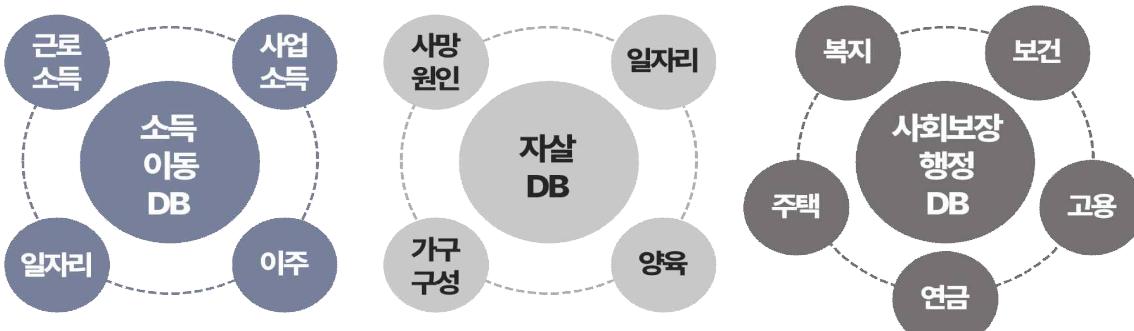
③ 사회보장행정DB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인구·가구등록센서스+연금+소득+주택+교육+취업 등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2-2.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 통계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AI의 통계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현황) AI가 공식 통계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고 환각 현상을 일으켜 부정확한 결과 산출
 - AI가 통계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색·추론·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표준화된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필수
 - *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내용·구조를 설명하는 데이터(data about data)
- (주요내용) AI가 통계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식·연결구조로 설계된 통계 메타데이터(온톨로지, 설명자료) 구축
 - (AI 신뢰성 확보) 오류·중복 제거, 즉시 분석·활용 가능한 클린데이터인 통계데이터를 AI가 활용하여 산출 결과의 신뢰성 확보



* 통계 온톨로지는 경로를, 통계 설명자료는 의미를 제공

- (추진 일정)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ISP,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추진일정	2026년	2027년 ~ 2028년	2029년 이후
추진계획	ISP 추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온톨로지 등 구축	구축된 메타데이터 대국민 개방

2-3.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AI를 활용한 통계 개발 및 데이터 이용 · 분석 지원

- (통계데이터센터 AI 도입) 데이터 안내 및 분석지원 등에 단계적 AI 도입*

* 대화형 프로그램 구축('26년) → 시범서비스('27년) → 고도화('28년~)

- ▶ (데이터 연계 지능화) 통계데이터센터에 AI를 도입하여, 이종 데이터 간 연계가능성을 진단부터 분석·반출까지 지원하는 지능화 추진
 - ▶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연계정보와 같이 분석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지원 서비스 추진
- *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탐색, 데이터 간 연계가능성 확인, 유사 연구사례 제시 등

- (AI 활용 실험적통계 개발) 자료정제 및 지표작성 방법 등에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품가격 지표」등 실험적통계 개발(12월)

□ 국가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안전한 활용

- (정보보호 기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AI 기반의 재현자료 생성 및 비식별화 처리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형암호 등 최신기술 검토(~12월)

* 정보보호를 통해 데이터 연계·활용·개방 시 우려되는 개인 및 민감정보를 비식별화

- (행정자료 입수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기관 서버용 암호화프로그램* 개발·지원(9월)

* 자료제공기관에서 선택·활용 가능하도록 PC용(既제공) 및 서버용 프로그램 모두 제공

- (행정자료 DB 품질진단 강화) 데이터 품질진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진단대상 확대** 등 행정자료 DB 품질진단체계를 표준화·체계화

* 오류율, 결측율, 코드값 유효율 등 측정 가능한 값을 기반으로 지표 정량화 등

** '26년은 부가가치세DB, 건강보험 가입자DB 등 활용성 높은 DB 약 30종 진단 실시, 진단 대상 DB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단 추진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26년)

3-1. 포용적 성장과 경제활성화 지원

□ 산업생태계 변화 파악을 위한 경제총조사 실시

-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등 구조·변화 파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약 71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 추진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AX), 산업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신규 항목 발굴 및 온라인조사 확대, 행정자료 활용 등 국민응답부담 감소를 통한 효율적 조사 추진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개요 >

- ✓ (조사대상) 2025. 12.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 (조사항목) 공통항목 12개, 특성항목 26개 / ✓ (조사인력/소요예산) 약 14,000명/약 659억원
- ✓ (조사일정) '26. 6. 12. ~ 7. 22. * 온라인조사(6. 1.~30.) 우선 실시

※ 종합시행계획 수립(2월), 교육(4~5월), 본조사(6~7월), 결과공표(12월 잠정, '27.6월 확정)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중점 추진사항 >

① 산업생태계 변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구조 반영 및 정책지원을 위한 신규 항목 발굴 신규 외국인 종사자,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스마트농장 운영, 로봇 활용, 무인매장 운영• 미래산업 생태계 등을 반영한 최신 산업분류 적용	 *국정과제 21,35,67,68,92
② 조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조사 목표(10%) 도입으로 조사 예산 절감 개선 온라인 조사 대상처 확대 및 현장조사 인력감축•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 조사원 처우 개선 및 안전대책 강화 등 조사환경 개선	
③ 국민 응답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항목 대체 및 신규 행정자료 입수 확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조사 규모 축소 개선 현장조사율: ('20년 기준) 53.0%→('25년 기준) 44.4%	
④ 고품질 통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 조사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주요 특징 >

인공지능(AI) 활용	온라인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산업분류 자동화(산업분류 1~3순위 제공)■ AI 기반 콜센터 운영(24시간 상담)■ AI 활용한 브랜딩 홍보(홍보방식 실시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조사율 확대: 8.1% → 10%(35만개)■ 조사방식 다양화: CATI, 웹팩스, 웹메일 도입■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조사 관리자 도입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정책 지원

-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작성하고, 지방정부별 수요에 따른 데이터 심층분석 지원(12월)
-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 경제선순환 구조파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12월)
 - * 시산결과의 관련 통계 간의 정합성 검토·분석 및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GRDP 정확성 제고와 지역·산업 간 연관관계 파악을 위해 시도별 공급사용표를 작성하여 실험적통계로 공표(5월)
 - * 103개 생산물별 × 17개 시도별 지역공급사용표 시험 작성하여, GRDP 등 관련 통계 정합성 검증, 작성방법 및 시산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수렴 실시

□ 현실 반영도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대표품목 및 가중치 산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높인 '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공표(12월)
 - * 품목선정(안) 공개·의견수렴(6~9월) → 지수개편 결과 국통위 상정(11월) → 결과 공표(12월)
- (집세지수 및 자가주거비지수 개선)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기반 집세지수 및 자가주거비지수**개선(12월)
 -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자료 ** 집세지수(전월세) 활용
- (온라인쇼핑동향 개선) 전자상거래 변화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추가* 입수 및 조사 대체를 통한 온라인 쇼핑동향 개선(~12월)
 - * 관세청 전자상거래 (기제공)수출 간이·일반신고서 + (추가)목록통관·목록변환 신고
- (경제지수 개편 추진)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반영을 위한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액 지수의 단계적 기준년 개편* 추진(~'27년)
 - * ('25년) 1차 추가예상 품목 선정·조사 → ('26년) 2차 추가 예상품목 의견수렴 및 소급 조사, 개편 기본계획 수립 등 → ('27년) 대표 품목확정, 개편 후 신지수 작성·공표

3-2. 공정한 사회 및 복지강화 지원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정책 지원

- (사회조사 심층분석) 중장년층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변화를 과거 시계열 및 '25년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층분석·보도(9월)
 - *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소득·소비·노동·노후준비·외로움과 외출빈도(고립 은둔) 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심층분석 및 기획보도
- (가사노동 가치측정) 무급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을 위한 가계생산 위성 계정* 작성·공표(4월), 국민시간이전계정** 승인·공표(6월)
 -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 **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
- (행정통계 지표 개선) 보다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부채통계*, 퇴직연금통계** 개선 추진 (12월)
 - * 공표단위 세분화(전국 → 시도), 매출액 증감과 부채 변동,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자료 입수로 퇴직연금통계 포괄범위 확대
- (불평등 지표 연구) 자산반영 소득분배지표 작성 검토 (7월) 및 다차원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불평등 지수 작성을 위한 데이터 연구
- (새로운 고용형태 파악) 다양한 고용형태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ILO, OECD)와 공조 및 디지털플랫폼고용 측정* 추진(~12월)
 - * 국제기구 논의사항 포함 조사표(안) 마련(1월) → 인지실험(~6월) → 시험조사 방법 검토(~12월)

□ 인구워기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 (인구주택총조사 공표) 가족돌봄영케어러, 결혼의향, 자녀계획, 활동제약, 다문화가구·외국인 현황, 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등 공표(11월)
- (장래인구추계 작성)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최근 인구 변화를 반영한 '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공표(12월)
- (인구동태패널통계 고도화) '83~'95년생의 혼인·출산 전·후 개인별 부채 변화 비율, 소득과 부채의 연계 분석 등 신규 지표 개발(12월)
 - * 한국신용정보원 개인 부채자료 신규 입수 및 통계 분석용 DB 구축, 통계 작성용 변수 생성(1~5월), 소득 범위 확장 및 부부 단위 분석 방안 검토(연중)

3-3.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지원

□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통계 확충

- (자살통계 개선) 사망원인과 가구구성, 양육, 일자리 등 주요 정보를 연계한 사망자통계등록부 신규 구축(12월) 및 자살통계 개선 추진
- (출생·사망 개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매년 작성·공표(8월), 사망 통계의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항목 확대 검토(~11월)

* 20대 후반~4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작성 기획보도('25.9월) 내용을 주기적 작성

□ 국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계 확충

- (소득이동통계 개선) 일자리, 이주 등 자료와 연계함으로써 경제·사회 여건에 따른 계층이동구조 분석(12월)
- (행정리별 생활기반 현황제공) 202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리 단위 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 등)을 통계지도로 서비스(12월)

*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 농산어촌 필수 시설현황

(예시) ① 대중교통수단, 운행횟수 ② 교육·학원·의료·문화·복지·금융·판매·서비스·교통·안전,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범용 CCTV

-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 세분화)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민생소비쿠폰 지급액 파악, 고령화 대응 정책 지원 등을 위한 공적연금 세분화
 - 공적이전소득에 민생소비쿠폰 수급액 파악, 공적연금 항목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지역연금 수급액으로 구분·조사(3월)
- (기후변화지표) UN 기후변화지표* 관련 한국 기후통계 점검 및 관리

* UNSD(유엔통계처)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통계지표를 모아놓은 것으로 5개 영역, 34개 주제, 158개 지표체계로 구성

- 기후변화 영향·적응·완화 정책현황 등을 분석한 기획보도(6월)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4-1.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 국민에게 편리한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 (이용자 맞춤형 KOSIS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통계표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된 형식의 통계 공유체계 구축(12월)
 - * 사용자가 원하는 통계 구성요소(항목 · 분류)를 직접 선택하여 간편하게 통계표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구축(경제활동인구, 소비자물가 등 2종 시범 적용)
 - ** 표준화된 형식(SDMX 등)으로도 통계를 제공(API, 다운로드 등)함으로써 외부 기관 및 국제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현
- (통계정보 시각화)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동향통계*」, 「아동가구통계지도**」 시각화 콘텐츠 신규 개발(12월)
 - * (KOSIS) 고용, 물가, 산업 등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인포그래픽 기반 통계를 시각화한 서비스 구축
 - ** (SGIS)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분석 서비스 개발
 - 소매업·외식업 등 생활밀접업종과 용접·산업용로봇 등 뿌리산업을 업종·매출·인구 측면에서 분석·시각화한 「업종통계지도」 서비스(6월)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재난 및 장애 대응) 정보시스템 및 통계서비스의 장애, 사이버 침해 대비 대체서비스 시스템 구현 및 백업*, 업무연속성 유지 방안** 마련(12월)
 - * KOSIS 대체 시스템과 핵심 통계DB 자체 백업^{월1회}, 소산^{반기1회}, 대체 서비스 가동 훈련^{연 1회} 실시
 - ** 전산실 운영관리규정 신설, 정보화 업무규정·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취약점 점검 등

4-2. 국가통계 제도·기준 정비 및 연구·교육

□ 통계제도 개선 및 기반 강화

- (통계법령 개정) 국가통계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을 위한 통계법령 개정 추진(하반기)
 - * (예시) 국가데이터기본법과 연계한 전문기관(특수법인) 설립 추진, 실험적통계 작성 근거 신설 등
 - ** (예시)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통계 작성 지원, 금융거래정보 자료(금융 실명법상 외부 제공 제한된 거래정보)를 위한 법적 근거 확립 등
- (통계 오류 사후관리 제도화)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을 추진(하반기)하고 통계작성기관으로 확대
- (신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AI·로봇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추진* 및 데이터 산업 분류 체계 검토(연중)
 - * 수요 연중 접수, 관련 규정 및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특수분류 개발·개정 지원

□ 데이터 연구 및 데이터 전문 인재 양성

- (데이터 통합 연구)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유형별 구조 표준화, GSIM* 기반 메타데이터 프레임 등 데이터 통합 연구(12월)
 - * 통계 생산·관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속성 및 관계를 명세하는 국제표준 메타 데이터 개념모델
- (AI 활용 통계 혁신)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계 분석 및 서비스에 적용할 AI 어플리케이션 연구** 추진(12월)
 - * 현장조사 분야 생성형 AI 활용(1~9월), 빅데이터 수집·연계 AI 기술 적용 연구(3~12월)
 - **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 작성 기초 연구(1~9월) 및 문서 요약 기능을 갖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적용 방안 기초 연구(3~12월)
- (AI·데이터 전문 교육) AI·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입문*, 심화**) 교육 운영(5월~)
 - * (입문) AI 활용 데이터 처리·분석·서비스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AI 운용 원리 이해
 - ** (심화) LLM 기반 AI 에이전트 개발 실습 등 AI 기반 통계서비스 혁신 실무 교육

4-3. 대내외 협력을 통한 통계·데이터 발전 선도

□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리더십 제고

- (2027 세계통계대회 추진) 통계분야 최고 권위 국제행사인 2027 세계통계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대내·외 역량을 최대한 동원 추진
 - * 준비기획단(2월), 자문단 및 준비위원회(9월) 구성, 개최 세부시행계획 수립(12월) 등
- (다자협력) UN 통계위원회(3월), OECD 통계정책위원회(6월) 참석, 데이터 관련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통계·데이터 현안 및 의제 주도
 - * (OECD 공동) AI 역량 강화 및 활용을 위한 OECD 공동 워크숍 개최(9월)
 - (ILO 공조) 노동의 국제이동 측정 방법론 주제로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9월)
- (양자협력) 통계 현안 논의와 선진기법 공유, 개도국 통계기법 전수 등을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와 신규 양자협력 확대** 추진
 - * (한국 개최) 중국, 일본, 몽골, 폴란드, (상대국 개최) 독일, 영국, 체코, 호주, UAE, 베트남
 - ** (신규 체결) 핀란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 (ODA 사업) 우리나라 통계혁신 사례·기법 및 K-통계시스템의 개도국 확산을 위해 수원국* 맞춤형 통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추진
 - * 튀니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라과이, 페루 등 6개국

□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데이터 확충 및 서비스

- (지역통계등록부 신규 구축)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12월)
 - *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축 방안 수립
- (민·관 연계 데이터 서비스) 지역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역단위 민·관 연계 데이터* 제공(12월)
 - * (공공) 인구·가구·주택·취업·아동가구등록부, 주택소유 및 신혼부부통계 (민간) SK텔레콤, KCB, 신한카드, SK브로드밴드, 카카오 모빌리티 등